

신정부의 바람직한 對北 경제협력 추진방향

배 중 렬*

- I. 문제의 제기
- II. 對北경제협력의 실태와 추진여건 분석
- III. 對北경제협력의 기초와 추진방향
- IV. 맺음말

요약

광산물·농림수산물 등의 단순교역, 섬유·의류분야의 위탁가공 등 민간주도로 진행되던 對北 경제협력에 전기가 조성된 것은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었다. 당국간 개발협력시대가 열리면서 ①에너지협력, ②경제특구건설, ③경공업원자재 제공, ④농업협력, ⑤법·제도 구축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천안함포격사건(2010. 3)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5·24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개성특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었다.

김정일사망 이후 등장한 북한 김정은체제는 선군사상이 포함된 김일성·김정일주의, 즉 김정일 유해를 통치이데올로기로 설정했다. 또한 장성택의 방중(2012. 8)을 통해 황금평과 라선의 북방특구 건설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중국의 東進에 이어 러시아의 南下도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의 심화·중산층 비중의 지속적 하락 등으로 인해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한국경제로서는 對北 경제적 영향력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對北 경제제재정책의 발전적 검토가 필요해졌고 ①중국의 동진과 러시아의 남하, ②자원경쟁의 격화와 기후변화의 가속화 등 동북아의 경제역학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개발협력전략의 마련이 시급해졌다.

對北경제협력의 전반적 기초는 ①북한 및 동북아지역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② 개발협력모델은 1960~70년대 한국형경제발전경험에 준거하며, ③경제특구형 중국식 개방모델을 참조하여, ④동북아 경제역학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동북아의 신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방향이 적절하며, 對北 경제협력의 추진방향은 ①수출주도형 경제구축 지원, ②신북방정책의 추진, ③정경분리 부문의 창출, ④패키지형 진출전략의 구사, ⑤북한경제의 글로벌화 유도 등으로 설정해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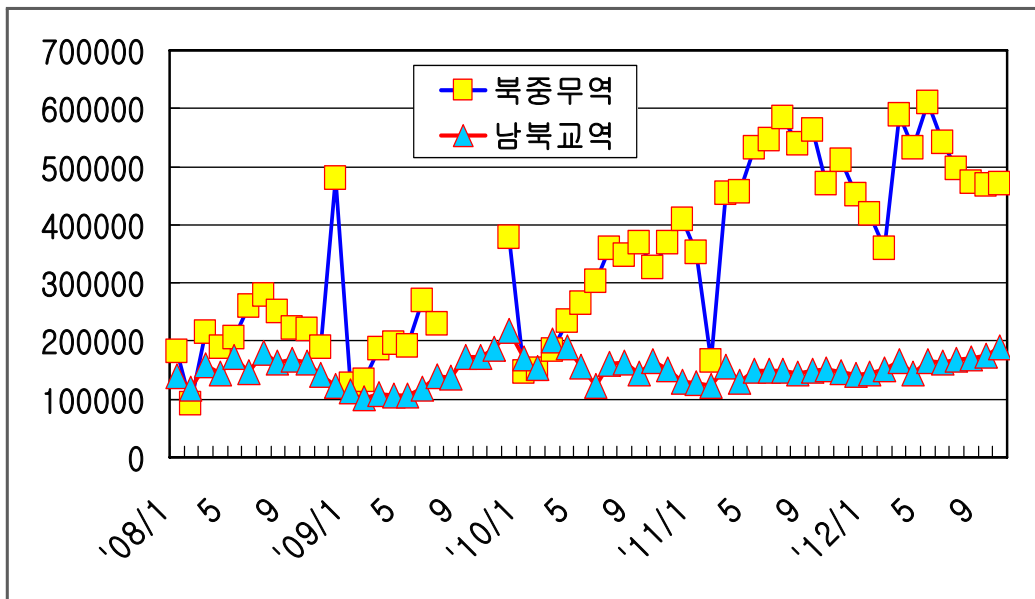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I 문제의 제기

1988년 7월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노태우정부의 7·7선언으로 시작된 남북한 경제교류는 그동안 핵문제 등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부침을 거듭해왔다. ①광산물, 농림수산물 등의 단순교역, ②섬유, 의류분야의 위탁가공 등 민간주도로 진행되던 對北 경제협력에 전기가 조성된 것은 김대중정부에 의해 추진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었다. ①개성과 금강산 경제특구의 건설, ②철도·도로의 연결, ③경공업 원자재의 제공 등 남북당국간 개발협력 시대가 열리면서 2008년 남북교역액은 18억 2,078만 달러로 2000년(4억 2,141만 달러) 대비 328%의 증가를 기록했다.

〈그림 1〉 남북교역과 北中무역의 추이(2008. 1~2012. 10)

단위: 천 달러



출처: 관세청 남북교역통계와 한국무역협회 중국해관통계

그런데 순항하던 남북한 경제교류에 장애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후계체 제구축을 위해 선군사상을 강화했던 2009년부터였다. 결정적 전기는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포격사건에 대한 韓中정부의 다른 선택이었다. 이명박정부는 개성을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對北경협을 제한하는 5·24조치를 시행한 반면, 중국정부는 3차례의 北中정상회담을 통해 오히려 對北경제교류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1>에서 시사하듯이 남북교역액은 17~19억 달러 선에서 정체가 발생하였고 北中무역은 2010년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2011년에는 北中무역 5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흐름은 황금평과 라선 경제특구의 北中공동개발 합의와 그 실행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東進을 우려한 러시아의 남하정책이었다¹⁾. 중국의 동북삼성 경제와 북한경제, 러시아의 연해주경제와 북한경제의 연계개발문제가 이슈화되면서 5·24조치 등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의 ‘유라시아 경제협력’, 문재인 후보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안철수 후보의 ‘북방경제론’ 등²⁾은 북방시장, 북방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담론 형성의 한 단면이었다.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기름을 부은 또 하나의 사건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의 사망(2011. 12. 17)과 어린 지도자 김정은의 등장이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4강의 지도부 교체로 인한 대북 정책의 변화가능성도 중요한 변수였다.

1) 2012년 10월 23일 러시아의 국가에너지안보재단이 주최한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 일부로서의 러·한 협력」세미나에서 러시아의 정치인과 학자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동 재단의 콘스탄틴 시모노프 소장은 러시아 관영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남북한통합을 통한 우리의 동방특급”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 대학(MGIMO)의 드미트리 라빈 교수는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극동시베리아개발의 핵심과제들은 폐쇄적이고 신뢰성이 낮은 현재의 북한정권이 유지되면 어렵다. 한국주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선일보, “러시아 국책연구소의 특별 보고서 북 붕괴 후.....”, 2012. 10. 29 참조).

2) 조성렬,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의 방향,” 「통일·외교·안보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대선 후보의 정책방향을 점검한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8차 전문가포럼, 2012. 11. 16, p. 44참조.

Ⅱ

對北경제협력의 실태와 추진여건 분석

1.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평가

가. 에너지협력

對北에너지협력은 핵협상과 관련된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대부분으로 남북 협력은 2000년 북한의 200만kW 전력지원요청과 2002년 상업베이스에 의한 개성공단 전력공급합의가 전부였다.

우선 남한이 약 16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던 KEDO사업은 총 2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2년 핵합의파기로 경수로건설이 무산³⁾됨에 따라 북한이 받은 실질적 혜택은 약 356만 톤(5억 2,100만 달러상당)⁴⁾의 중유획득뿐이었다. 그리고 2007년 2·13핵합의에 따른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지원(중유와 발전설비·자재를 5개국이 각각 20만 톤씩 부담)도 합의이행과정의 문제로 남한의 부분적 이행과 일본의 지원거부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74.5만 톤 상당의 중유만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2000년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요청했던 200만kW의 전력지원은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및 전력실태 공동조사단의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남북한 간의 입장차이로 2001년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 다만, 남북한 간에 유일하게 성사되었던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은 ①2004년 시범지구 15,000kW배전망 건설, ②2007년 10월 1단계 준공, 154kV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 완공으로 이행되고, ③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12월 현재 전력판매량도 지속적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그런데 對北에너지협력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05년 7월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중대제안의 형태로 발표한 남한의 200만kW 대북직접송전

3)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경수로사업비 총 15.75억 달러 중 한국이 11.46억 달러, 일본이 4.11억 달러, EU가 1,800만 달러를 부담하였다(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KEDO 경수로사업지원백서」, 2007, p. 270).

4) 위의 책, p. 241.

제안이였다.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경수로공사를 종료하는 것에 합의할 경우 3년 내에 200만kW 전력을 직접송전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남한의 제안은 제4차 6자회담(2005. 9)에서 재확인되었다. 또한 2005년 9·19선언에서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남한의 200만kW 대북직접송전제안은 언제든 논의가 가능한 이슈로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 간의 합의경협사업에 대한 전력공급문제였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여러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북한과 합의하였는데, 예를 들어 ①경제협력단지(개성공단의 2단계사업, 황해남도 해주), ②조선협력단지(강원도 안변, 평안남도 남포), ③광산개발단지(함경남도 단천) 등 10·4합의사업의 건설은 남한이 전력협력을 약속한 바는 없으나 동 사업이 실행시 어떤 형태로든지 전력제공은 불가피하다는 점이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전력설비의 노후화, 발전원료와 부품의 부족 등으로 발전설비 이용률이 25~30%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은 사용제한을, 공장은 교차생산방식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①실주파수 50Hz수준, ②실전압 180V수준, ③송배전손실률 50%이상으로 전력품질도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이였다.

나. 경제특구건설

금강산 및 개성특구의 건설사업은 원래 현대그룹의 민간사업이었으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 당국의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예컨대 ①접근로 확보를 위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사업의 시행(착공: 2002. 9), ②2002년 현대와의 공동사업자로 토지공사 지정, ③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07. 5), ④기반시설 건설자금 무상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의 기반으로서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도 초기 5년간은 부진했으나 육로관광이 개시된 2003년 9월부터는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 해졌다.

금강산 및 개성특구의 사업이 순항함에 따라 남북한 당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 실무회담에서 ①개성공단 2단계사업의 추진, ②근로자 숙소건설 등에 합의 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사망사건과 관련된 남북한

이전의 증폭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되고⁵⁾, 또한 천안함포격사건이후 단행된 5·24조치에서 개성공단의 신규투자가 금지되면서 경제특구의 건설사업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①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②저렴한 물류비, ③인근에 대규모 소비시장의 존재, ④외국에 비해 의사소통의 원활 등 국내 중소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의 제공이 가능해 그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①개성지역 노동력 공급부족으로 대규모 숙소건설이 필요하며, ②북측 기관·기업소·단체의 공단진출이 사실상 금지되어 북한경제와의 산업적 연계가 약하며, ③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주요 장애요소였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1단계 입주완료시 10만명 이상의 고용이 예상되나 개성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노동력은 약 5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며⁶⁾, 한·미 및 한·EU FTA의 합의사항에서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가능성은 열려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다. 경공업원자재 제공

8,000천만 달러상당의 경공업원자재 지원대가로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용양, 대흥)의 공동개발에 합의했던 경공업원자재 제공사업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중심으로 광산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역시 5·24조치로 중단되었다.

현재 사업의 진행상태는 남북한의 합의⁷⁾에 의거 남한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의복류(2,700만 달러), 신발(4,200만 달러), 비누(1,100만 달러) 생산에

5) 북측의 책임인정과 재발방지약속 등을 둘러싼 남북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2일, 개성관광은 2008년 11월 29일에 중단되었다(양문수,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북중경협의 확대심화와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경제협력포럼 주최 2011년 송년 남북경협정책토론회, 2011. 12. 22, p. 44).

6) 홍익표는 「KDI북한경제리뷰」 기고논문에서 “2012년 12월말 기준 개성공단 내 북한근로자는 4만 6,284명” 인데, “북한당국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 인근지역의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공급되는 인력의 질도 낮아지고 40~50대 근로자들을 공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홍익표,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및 활성화 방안,” 「KDI북한경제리뷰」, 2011년 5월호, p. 31과 40).

7)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2006. 6. 6),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2007. 4. 22),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의 공동보도문(2007. 5. 4),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2006. 7. 7)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남북관계」, 2010, pp. 226~245).

필요한 경공업원자재 현물을 차관형식으로 제공했고, 북한은 지하자원을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차관금액(8,000만 달러)의 3%(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아연괴 1,000톤으로 상환했다. 그리고 차관 금액 중 남은 97%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에 따라 2014년부터 상환될 예정이라 새로운 정부에서 동 사업의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의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차관잔여분은 ①공동개발에 의한 지하자원생산물, ②개발권, ③생산물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⁸⁾.

3차례의 공동조사를 거쳐 투자컨소시엄의 구성이 추진되었던 동 사업은 ①2009년 이후 북한 신년사설의 화두가 경공업이며, ②검덕광산은 경공업성의 관할이라 그 개발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단천지역은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상의 개항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송전방식에 의한 전력공급도 힘든 지역이라 추가 해상항로의 개설⁹⁾과 함께 허천강수력발전소의 실태조사¹⁰⁾ 등 전력공급방안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라. 농업협력

그동안 對北농업지원은 무상공여방식보다는 차관공여방식이 선호되었고 북한의 긴급한 식량사정 때문에 개발협력보다는 인도적 지원에 치중되면서 식량·비료의 직접지원이 대종을 이루어왔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994년 10월 제네바핵합의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북한의 상황은 대량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1995년부터 한국정부의 대북식량차관제공이 중단된 2007년 기간 동안 남한의 對北지원은 ①직접식량지원 285만 톤(쌀 265만 톤, 옥수수 20만 톤), ②WFP를 통한

8) 남북한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제8조에서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97%를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환한다”고 규정했다.

9) 남북한은 남북해운합의서(2004. 5. 28) 제4조 2항에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과 북측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홍남, 청진, 나진항 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고 규정했다.

10) 현재 단천지구 전력공급은 1940년대 일제가 건설한 허천강수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허천강수력은 220kW 검덕변전소를 통해 검덕광산, 룡양광산, 대흥광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윤재영, “단천 자원 특구 개발을 위한 전력공급방안 검토.” 「북한 지하자원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자원연구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동주최 북한자원포럼 2012, 2012. 10. 5),

식량지원 54만 톤(옥수수 등), ③비료지원 255.5만 톤 등을 기록했다. 남한정부의 식량·비료의 對北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완화, 남북대화의 개최,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일조했으나 ①북한당국에 직접 공급되어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했고, ②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③개발지원으로의 전환 없이 장기간 인도적 지원에 안주했다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그런데 개발지원성 농업협력이 합의된 것은 제 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 8. 19)였다. 당시 ①시범협동농장 조성 및 운영, ②현대적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 시설 협력, ③우량 유전자원 교환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④축산·과수·채소·잡업·특용작물분야 협력, ⑤양묘장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등 5개 분야가 합의되었으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의 진척이 여의치 못했다. 예를 들어 시범협동농장사업은 북한의 반대로 민간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3년간(2006~2008) 금강산지역 삼일포금천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①벼농사의 생산증대, ②토양개량, 지력증진 등을 통해 밭작물의 생산증대, ③영농기반복구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대북농업협력에 있어서 또 하나 전기가 조성된 것은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과 후속조치였다. 평양 강남군 고읍리에 5,000두 규모 양돈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합의서(2007.11. 5)와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7. 12. 18), 그리고 ①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②동식물 검역체계의 확립 과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협력, ③과수, 채소, 잡업, 축산,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④동해수역 입어 및 어로, 수산물 생산·가공 및 우량품종 개발, 양식협력 등 수산분야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등을 규정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15)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 추진동력을 상실하였다.

마. 법·제도 구축

남북한 경제교류가 비록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그 경제교류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상당기간 북한에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對北 교역과 투자에 나서는 사업가들은 계약서에 의존하거나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였다. 남북한 간에 경제특구건설이

추진되면서 북한은 ①금강산특구법(2002. 11. 13)과 개성특구법(2002. 11. 20)의 제정, ②남북관계 모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의 제정(2005. 7. 6), 그리고 ③경제특구와 관련된 각종시행규정, 준칙, 지침, 기준 등을 마련하여 남북경제교류를 제도화·공식화하였다.

예를 들어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2011년 말 기준 ①기업창설·부동산관련 8개 준칙(기업창설·운영, 부동산등록, 부동산집행, 지적, 토지계획 및 이용, 하부구조 시설관리, 건축물의 분양, 신탁), ②건축관련 1개 준칙(건축)과 6개 지침(건축세부,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설계서작성, 건설사업자 선정), ③안전관리관련 5개 준칙(가스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노동안전, 소방, 전기안전), ④보건·위생·환경관련 5개 준칙(대기환경관리, 식품위생 및 전염병예방, 수질환경관리, 폐기물관리, 소음진동관리)과 1개 지침(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⑤외화관리·광고·자동차관련 3개 준칙(외화관리, 광고, 자동차등록)과 2개 지침(야외광고물기준, 자동차등록번호부여와 자동차등록번호판부착 및 봉인), ⑥일반 관리관련 8개 준칙(수수료징수, 주요물자관리, 주차장관리, 통계자료, 기업책임자 회의조직·운영, 석유판매업, 준칙제·개정절차 및 공포, 출입증발급), ⑦기업회계·감정평가·회계검증관련 3개 기준(기업회계, 감정평가, 회계검증)과 1개 준칙(회계검증) 등 도합 31개 준칙과 9개 지침, 그리고 3개 기준이 마련되면서 헌법 제9조¹¹⁾ → 북남경제협력법 → 개성공업지구법 → 개성공업지구 시행규정 → 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지침, 기준 포함)으로 이어지는 법령체계가 정비되었다¹²⁾.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북한의 내부법제화는 그 제도화·공식화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개선점도 제기되었다. 첫째는 경제특구 건설에만 너무 치중하여 개성과 금강산 이외의 지역 진출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북남경제협력법의 부문법령의 정비까지 그 힘이 미치지 못했다. 둘째는 금강산과 개성이 북한식 특수경제지대인 것은 사실이나 북한헌법에 규정된 특수경제지대로서의 지위는 부여되지 못했다.

1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법령체계는 헌법 제37조 → 외국인투자법 → 부문법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12) 배종렬, “김정일시대 북한 개방법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통일과 법무』, 2011. 11 겨울호, pp. 31~32.

2. 추진여건 분석

가. 북한의 여건

(1) 김정일 노선의 계승

김정일 사망이후 가장 주목되는 북한의 변화는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선군경제건설 노선의 유지이며, 둘째는 개혁·개방지향적인 경제특구의 확대가 경제강국건설의 양대 축으로 설정된 점이었다.

먼저 선군사상의 노동당 지도사상화, 즉 김정일우상화정책은 ①금수산기념궁전에 김정일 안치, ②김정일 동상건립, ③광명성절 제정, △영생탑 건립을 골자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의 특별보도(2012. 1. 12)로 시작하여 2012년 4월 당대표자회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김정은체제의 지도사상으로 정립되면서 일단락되었다¹³⁾. 이는 선군사상에 기초한 북한군부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우선지배권이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¹⁴⁾는 점을 시사해 경제강국건설의 핵심요소인 경공업과 농업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동원은 외자유치 또는 국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2012. 1. 30)을 통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제·개정사실의 공표였다¹⁵⁾. 그 골자는 황금평·위화도지역과 라선지역에 특혜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특수경제지대의 설치였는데, 개성 및 금강산의 남방특구와는 달리 헌법적 뒷받침을 받는 특수경제지대의 설치였다. 이로써 북한의 라선지역은 헌법상 특수경제지대로

13)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2012. 4. 11)에서 북한은 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갈데 대하여, ②조선로동당당규약개정에 대하여, ③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④조직문제에 대하여 등 4가지 사항을 결정했는데,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규정했다(로동신문, 2012. 4. 12).

14) 현재 북한경제는 광산 등 핵심자원들을 군부 산하의 기업소가 장악하여 수출하며, 가동되고 있는 내각의 경공업공장들도 군수품수요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구조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경공업,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각이 동원할 수 있는 내부 경제적 자원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김정일 사망(2011. 12. 17) 전후로 제·개정된 외국투자관계법은 ①11월 29일자의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토지임대법, ②12월 3일자의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③12월 21일자의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은행법의 총 14개법이었다.

그 지위가 격상되고 황금평·위화도지역은 헌법상 지위를 갖는 특수경제지대로 새로 지정되었다.

(2) 북방특구시대의 개막

또 하나 주목되는 흐름은 선군사상을 포함한 김정일유훈이 김정은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화한 2012년 4월 이후 북한 지도부의 첫 방문지역이 중국이었다는 점이다. 장성택의 중국방문(2012. 8)은 北中간의 황금평·위화도와 라선경제특구의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사업이 김정은체제에서 실천단계로 돌입했음을 의미했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은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3차례 방중을 통해 중국과 황금평과 라선 북방특구의 공동개발·공동운영에 합의하여 경제협력의 중심축을 개성·금강산특구의 기존 남북경제협력구도에서 북방경제협력구도로 전환했다¹⁶⁾.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원리, 호혜공영의 4원칙하에 추진되는 두 경제지대개발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2010년 7월 설립)의 주도로 2010년 하반기부터 ①北中 정부간 협정체결(2010. 12), ②개발총계획 작성¹⁷⁾, ③국내관련법규 제정 등 경제지대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¹⁸⁾를 정비해 왔다. 그런데 장성택의 중국방문시 북경에서 열린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2012. 8. 14)¹⁹⁾ 이후 중국은 ①해화집단(海華集團)의 청진항진출을 위한 합영계약서를 체결

16) 천안함사건(2010. 3)이후 김정일은 2010년 5월, 2010년 8월, 2011년 5월 3차례의 방중과 2011년 8월 1차례의 방러를 통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와의 북방경제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대련, 천진, 심양, 길림, 장춘, 하얼빈 등 동북삼성시찰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반영되면서 라선특구법은 수정보충이 아니라 신규제정수준으로 개정되었고,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등 외국투자관계법 전반의 수정보충도 이루어졌다.

17) 2011년 5월 23일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이 발표되었는데, 동요강에 반영된 북·중 합의사항은 △총체적 계획, 단계별 실시, 정부인도, 공동개발, 기업위주·시장운영, 우세 호상보충, 호혜공영 원칙, △시장원칙에 따른 자주적 기업경영정책실시, 노동시장 설치와 전체종업원 대상 노동계약제 실시, 자원개발투자의 장려가 포함된 산업입주허가정책의 제정, △특혜적인 세무·토지·금융정책의 실시(인민폐 결제, 단독은행 설립 허용), △전향적 통관정책의 실시(중국 국내 무역화물선의 라진항 입항과 중국 국내 무역화물의 선적과 하역 허용, 중국 국내 무역화물선의 조선연해항로 통과 허용) 등이었다.

18) 북·중 합의사항의 법제화과정에서 라선특구는 국제적인 중계수송에 초점을 맞춘 경제무역지대로, 황금평 특구는 제조업건설에 중점을 둔 경제지대로 규정되고 개성특구식의 관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법령은 개성·금강산의 남방특구법제와 유사하게 법→규정→세칙→준칙으로 체계화되었는데 △헌법적 뒷받침, △노력채용·시장진출 등의 경영활동조건, △개발방식, △투자보호의 수준 등에서 개혁·개방성이 강화되었다(자세한 사항은 배종렬, “최근 개정된 북방특구법제의 개혁·개방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2년 봄호, pp. 49~77 참조).

19) 조선신보, 2012. 8. 29.

(2012. 9. 1: 943만 7,840유로의 하역설비, 운수장비, 항만건설자재 제공)하고²⁰⁾,
②라진-원정간 도로개통식과 北中 라선경제무역구관리위원회 현판식 개최(2012.
10. 26) 등을 단행했다²¹⁾.

나. 남한의 여건

(1) 성장동력의 소진

한국경제는 1990년대 초반에 그 성장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여파로 인한 세계경제로의 편입 가속화였다.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는 중산층 비중의 지속적 하락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득불평등도의 심화였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중산층의 구성, 소득과 소비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1인당 GDP는 3배 이상 늘었으나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되는 중산층의 비중은 7.9% 줄었고 가계수지도 악화되어 삶의 질이 하락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대표 가구가 1990년의 “30대 고졸 제조업 남성 외벌이”에서 2010년 “40대 대졸 서비스업 남녀 맞벌이”로 변화했고,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중도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크게 높아졌다²²⁾.

또한 소득세자료를 이용하여 1976~2010년간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연구한 김낙년의 논문²³⁾에 의하면 ①한국의 소득집중도는 1970~90년대에 걸쳐 비교적 낮은 수준을

20) 최형규, “중국 동해 출구전략 2탄 북한 나선항 이어 청진항 운영권도 확보,” 「중앙일보」, 2012. 9. 11 및 연변TV방송국, “도문시 해화그룹 조선 청진항부두 공동경영권 취득,” 2012. 9. 12(<http://www.iybtv.com/html/xinwen/yanbianxw/zjj/61505.html>).

21)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6일자과 고길룡, “중조 라선경제무역구 원정-라진도로 개통,” 「연변일보」, 2012. 10. 29.

22) 또한 중산층의 소득 구성도 변했는데 ①자영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상소득 가운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고, ②사회안전망의 확충에 따라 이전소득의 차지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중산층의 경직성 지출 비중도 급증했다. ①지난 20년간 부채상환액 비중은 2.5배, ②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준조세지출 비중은 3배이상, ③사교육비, 통신비 지출 비중은 3배가량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여력의 감소에 따라 중산층의 선택적 지출도 줄어들었다. 오락·문화비 비중이 1990년 4.3%에서 2010년 4.1%로 감소했다(김동열,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1990년 이후 소득 및 소비 구조의 변화,” 「경제주평」, 11-30〈통권 457호〉, 현대경제연구원, 2011. 8, 26, p. 3).

23) 김낙년,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제18권 제3호(2012. 9),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p. 75.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②외환위기 이후 10년간에 걸쳐 소득집중도가 급속히 높아졌으며, ③최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비중이 더 빨리 늘어났고, ④1990년대까지는 유럽·일본형의 비교적 낮은 소득집중도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 급속히 英美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경준²⁴⁾도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개선되었으며,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한 후 최근에는 약간의 감소 후 정체상황이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중산층의 복원문제가 중요한 시대과제로 부상했다.

그런데 소득불평등도의 심화, 중산층의 약화 등으로 상징되는 성장동력의 소진은 국내생산기반의 붕괴, 실업자의 증대, 사회갈등의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통일역량의 감소로 귀결된다는 점이였다. 예를 들어 통일연구원의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94년 91.6%에서 2005년 83.9%로, 그리고 2009년에는 78.3%로 계속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KBS의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반드시 통일이 돼야한다”는 응답이 2005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²⁵⁾.

(2) 對北경제적 영향력 축소

2010년 5·24조치이후 남북교역의 축소를 능가하는 對中무역의 확대가 발생하면서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무역이 오히려 큰 폭으로 증대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는 중국의 협조가 없는 對北경제제재는 남한의 對北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통일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교역액은 2009년 16억 6,608만 달러, 2010년 19억 149만 달러, 2011년 16억 9,067만 달러, 2012년 1~10월 기간 16억 3,321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北中교역액은 2009년 26억 8,073만 달러에서 2010년 34억 6,568만 달러, 2011년 56억 2,919만 달러, 2012년 1~10월 기간 49억 5,938만 달러로 급상승했다. 그 결과 2007년 대비 2011년 北中무역은 4.7%가 감소한 남북교역과는 달리 185.2% 증가

24) 유경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2012. 4. 23(통권 제15호), 한국개발연구원, p. 2.

25) 설문조사결과 ‘반드시 통일이 돼야한다’는 응답은 2005년 29.1%, 2010년 28.0%, 2011년 27.3%, 2012년 25.4%로 하락세인 반면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005년 36.1%, 2010년 43.0%, 2011년 47.1%, 2012년 43.0%로 40%대를 유지하였다(이주철,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2부: 국민통일의식 변화추세 1999-2012」, KBS, 2012. 10. 25).

〈표 1〉 북중무역과 남북교역 추이(2007~2012. 10)

단위: 천 달러

구 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			북·중 및 남북간 임가공		
	대중국(A)	남북한(B)	B/A	대중의류수출(C)	대남의류반출(D)	D/C
2007	1,973,974	1,797,896	91.08	60,370	164,896	273.14
2008	2,787,279	1,820,366	65.31	77,296	252,173	326.24
2009	2,680,734	1,679,082	62.64	93,260	308,783	331.10
2010	3,465,678	1,912,249	55.18	160,577	352,500	219.52
2011	5,629,192	1,713,855	30.45	356,891	211,080	59.14
2012. 1~10	4,959,383	1,633,207	32.93	296,789	215,514	72.62

출처: 한국무역협회, KOTRA 및 관세청

했으며 임가공의 주요품목인 의류의 對中수출도 28%의 증가에 그친 남한으로의 의류반입과는 달리 491.2% 증가했다.

그런데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무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저하에 이어 보다 심각한 것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는 1988년 7·7선언이후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축적되었던 對北 생산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둘째는 평양 등 여러 지역에 산재되었던 對北 임가공지역이 개성지역으로 국한되었다는 것이었다.

다. 국제적 여건

(1) 중국의 東進

북한의 핵실험(2009. 5) 이후 북한문제(후계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접근하는 구도²⁶⁾가 중국의 對北정책기조로 채택되면서 ①동북삼성과 북한경제의 연계개발, ②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해체, ③북한자원개발의 강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중국의 東進정책이 가속화되었다.

첫째, ①신압록강대교의 건설, ②동변도철도의 연결, ③황금평·라선 경제특구의 공동건설 등 인프라건설을 포함한 北中 접경지대개발에서 중국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26) 배종렬,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수은북한경제』, 2011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pp. 61~62.

것은 중국 훈춘-북한 나진항(청진항)-중국 상해 포동항으로 연결되는 물류체계의 구축이었다. 북한 북부항만을 수출입항이 아니라 중국의 내항화시키는 구도하에 중국 중계화물(현재는 석탄)의 수송출항식이 北中間에 공식적으로 개최(2011. 6. 9)되었는데²⁷⁾, 동 조치가 중국의 對北 자원개발 및 중화학공업투자와 연계될 경우 라선지역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북한의 동해지역은 향후 중국경제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연변조선족자치주, 즉 간도의 해체는 ①백두산관할권의 길림성 이전(2006. 8)²⁸⁾, ②연룡도(연길·용정·도문)일체화 계획추진, ③장길도(장춘·길림·도문) 개방선도구 건설 등 중국이 對두만강지역개발전략을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①對北창구로서 길림성과 요령성의 전면등장, ②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국 내 정치·경제적 위상하락, ③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해체가능성 언급(2010. 3. 6)²⁹⁾ 등이 발생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뿐만 아니라 압록강·두만강일대 북한주민의 중국화가 가속화되었다.

셋째, 중국의 對北투자 대부분은 현재 자원개발분야(전체투자의 70%정도로 추정)로 대규모 교통시설투자가 수반되지 않고 중국으로의 운송이 용이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라선특구건설에 이어 중국이 확보한 동해항만의 설비투자가 진척될 경우 중국의 對北자원개발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er)의 자료(2012. 3)에 의하면 지하자원분야 외국기업진출 총 89개 사업 중 80개 사업을 중국이 차지했으며³⁰⁾, 2011년에는 그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무연탄, 철광석, 동광, 납 등의 품목에서 북한의 對中수출이 괄목할 정도로 증가(<표 2> 참조)되었으나 2012년 7월부터 북한의 對中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에 전년수준을 하회(<그림 2> 참조)하는 이상기류가 등장했다.

27) 위의 논문, pp. 63~64 및 흑룡강신문, “중조라선경제특구착공.” 2011. 6. 10를 참조.

28) 길림신문, “장백산관리위원회 정청급으로 진급,” 2006. 8. 3 및 연변일보, “장백산관리위원회 청급으로 승격,” 2006. 8. 14.

29) 길림신문, “연변 <주>를 연변 <시>로 만들려고 한다.” 2010. 3. 9.

30) 최경수, “바람직한 북한 지하자원협력사업 추진방안,” 「북한자원포럼 2012: 북한 지하자원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자원연구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2012. 10. 5.

〈표 2〉 HS26, 27류 주요 광산물의 對中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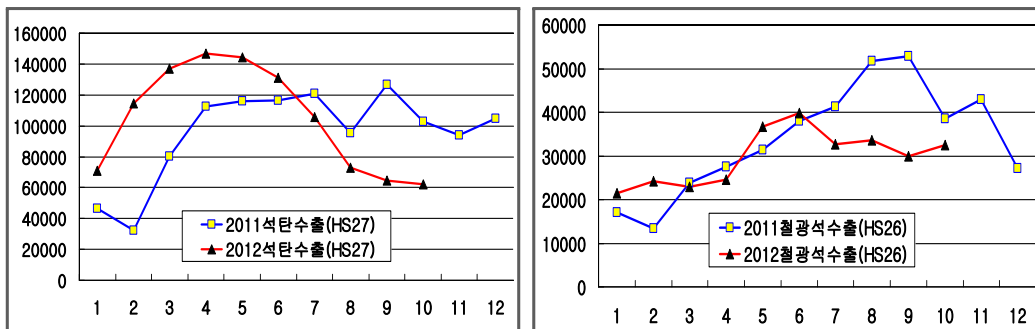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구 분	철광석 (2601)	구리(동광) (2603)	납 (2607)	광·슬랙 (26)	무연탄 (270111)	광물연료 (27)
2010	194,316	13,134	14,585	251,168	386,188	396,849
2011	324,454	25,374	23,717	405,710	1,126,850	1,149,077
2012. 1~10	209,109	16,473	25,804	298,386	1,037,467	1,050,377
2011. 1~10	271,693	21,649	19,425	335,778	931,312	950,470

출처: 한국무역협회와 KOTRA.

〈그림 2〉 석탄과 철광석의 월별 對中수출(2011~2012. 10)

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2) 경제역학의 변동

최근 ①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력부족현상의 심화, ②국제금융위기의 지속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저성장, ③기후변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동, ④美中간의 자원경쟁 격화 등이 발생하면서 동북아의 경제역학도 변동할 조짐을 보여주었다.

특히, 세계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국제분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의 위상이 상승했으며, 북한경제가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지역은 봉제산업 등 노동집약적이고 저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세계의 중요생산기지의 하나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북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의 재평가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는 2011년 춘절

(春節)기간 불거졌던 ‘농민공’ 부족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경 장강, 주강삼각주, 절강성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노동력수급불균형이 이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착된 점이었다. ①‘한 가구 한 자녀’정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②내륙지역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상승, ③노동력 수요공급의 불일치, ④신세대 ‘농민공’의 의식변화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나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감안할 때 중국도 이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³¹⁾. 둘째는 중국 내몽고를 포함한 동북삼성의 중국내 위상 상승이었다. 동북삼성이 중국의 중화학공업기지, 식량기지, 에너지기지로 인식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도 극동을 중시하는 정책의 채택과 함께 남·북·러 연결 가스관사업 등을 통해 동북아 및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 측면도 발생했다. 내몽고, 동북삼성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하투(河套)·내몽고지역에 이어 만주지역의 사막화문제가 경제현안의 하나로 부상했다. 2000년대 이후 황사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매년 1조 3천억에서 9조 9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³²⁾. 중국은 과도한 방목과 기후변화가 사막화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하나 실제이유는 1950년 이후 한족이주정책에 기초한 정착농경(개간)과 난개발(채광)로 인한 유목문화의 상실이 직접적 동인이었다.

사막화문제에 이어 또 하나 주목해야할 환경적 요소는 기후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주는 두 가지 시사점이었다. 첫째는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있고, 산림이 황폐화(정체 산지의 32%로 추정)된 북한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에 극히 취약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온난화에 의해 주산단지의 변화 등 한반도 전체의 농업생산체계가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 연해주지역 등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농업작물의 종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³³⁾.

31) 동북삼성의 중심인 요령성 역시 2011년 현재 노동력부족상태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임민경, “중국의 노동력 부족현황과 전망: 랴오닝성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2011. 5. 9(Vol. 2 No.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5를 참조.

32) 이수광, “황사의 근본적 원인, 사막화,” 『The Environment, Monthly』, 2009. 1, p. 62.

33) 예를 들어 기온에 민감한 사과재배적지의 변동과 북상,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배추재배적지의 북상과 고산지대로의 이동이 예상된다.

Ⅲ

對北경제협력의 기초와 추진방향

1. 경제협력의 전반적 기초

對北 경제협력의 전반적 기초는 1)북한지역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2)개발협력모델은 1960~70년대 한국형경제발전경험에 준거하며, 3)경제특구형 중국식 개방모델을 참조하여, 4)경제역학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동북아의 신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위기대응방식은 개혁보다는 개방지향적 변화를 선호해 왔다. ①1970년대 말 중국 등소평의 개혁·개방시에는 1984년 합영법체제로, ②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시에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건설로, ③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에는 금강산과 개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경제관계의 제도화와 北中경제관계의 강화로, ④2009년 핵실험이후에는 황금평·위화도, 라선 등 북방경제특구의 건설로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사례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새로 등장한 김정은체제가 김정일유산을 강조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선언함에 따라 김정은체제도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개혁보다는 개방을 선호할 것이며, 그 개방지역은 경제특구 등 정해진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정해진 지역·수출부문을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 북한개발협력의 모델은 수출주도형인 한국식과 특구중심 수출대체형인 중국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①개혁·개방당시 국민의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중국과는 달리 국민의 60%이상이 비농업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②57개 민족의 연방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단일민족으로 중앙통제력이 월등 강하며, ③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경제개발초기 홍콩을 활용할 수 있었던 중국과는 다르며, ④남한과 반대로 경지면적의 60%이상이 밭이라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수출주도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형 경제건설모델을 참조, ①총력수출체제로의 경제기조전환 유도, ②변화선도그룹의 형성지원, ③북한이 포함된 동북아협력의 청사진 준비, ④경제적

각도에서 환경문제의 인식과 환경복원을 위한 신국가건설 틀의 설계 등을 對北개발 협력의 중심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형경제건설론의 골자는 ①국제 분업구조를 고려한 산업건설노선, ②테크노크라트 주도형 경제개발체제, ③국가적 계획체제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④대외지향적 거시경제 안정책의 강구 등으로 요약된다³⁴⁾.

2. 경제협력의 추진방향

가. 수출주도형 경제구축 지원

일종의 수입대체전략에 바탕을 둔 북한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출할 수 있는 공장,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수출산업화를 기획할 수 있는 관료, 수출능력이 있는 기업가, 외화를 벌 수 있는 노동자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①경공업공단, ②자원개발특구, ③농수산물특구, ④글로벌기업의 부품기지 등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에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안정적 수요가 존재하며, 국제 분업구조상 북한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노동력과 부동산(천연자원 포함)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한국의 국제시장도전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즉 완제품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반제품, 중간원료, 기초원료(중화학 공업)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출산업화를 기하는 피라미드형 공업화방식을 채택했으나 이미 남한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글로벌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력만 있다면 바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신북방정책의 추진

중국의 東進, 러시아의 南下,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생태계의 북상이라는 환경 속에 북한은 ①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수립(2010. 1. 15)³⁵⁾, ②북방 철도

34)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색,” 『수은북한경제』, 2005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pp. 1~25 참조.

35) 북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이 작성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총투자규모는 1,000억 달러로 ①농업 개발, ②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라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③석유에너지개발, ④2천만 톤 원유가공,

물류시스템의 정비, ③북방특구의 건설 등 중국, 러시아와의 북방삼각협력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對北개발협력 추진전략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의 발전적 검토를 통해 현재 개성지역에 국한된 남북개발협력지대를 북상시키는 한편, 중국의 동북삼성과 러시아의 연해주지역 등에 황사예방시스템, 가스관연결사업 등과 같이 남·북·중, 남·북·러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개발협력프로젝트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성과 금강산 등 남북한 접경지대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직시해야 할 것은 북한의 노동력수급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잠재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인력을 방출할 수 있는 ①군수산업의 민수화, ②협동농장 개혁 등의 구조조정, ③노동시장의 허용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특정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노동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①무리한 중화학공업건설, ②자력갱생과 자급자족정책, ③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노선 등 전력·석탄·인력의 과소비형 구조로 인해 196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³⁶⁾.

따라서 노동력조달이라는 관점에서 본 북방협력지대의 입지는 ①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②제대인력의 집단공급, 노동시장 허용 등을 통해 기숙사와 아파트건설 등 배후도시의 건설경제성이 확보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개성, 평양, 남포 등 남서부지역은 ①한국의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②육상운송이 가능하며, ③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물류비를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도 존재해 산업공단건설의 적지로 평가된다. 또한 남한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경공업(섬유류 및 생활용품), 전기전자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및 아시아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³⁷⁾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소였다. 이는 북한산 제품의 미국

⑤전력 3천만kW 생산, ⑥지하자원개발, ⑦고속도로 3천km 건설, ⑧철도현대화 2,600km, ⑨공항·항만 건설, ⑩도시개발 및 건설, ⑪국가개발은행 설립, ⑫제철 2천만 톤 생산 등 총 12개 사업분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6) 오원철, 「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1995, p. 38.

37) 2006~2010년 기간 경공업과 전기전자분야 한국의 對中해외투자는 59.7억 달러, 한국의 對베트남투자는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의류(HS62)의 對中수입은 22억 9,459만 달러, 對베트남수입은 6억 2,353만 달러였는데, 2006년의 의류수입은 각각 19억 6,301만 달러, 4,867만 달러였다. 그런데 중국은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갔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고, 베트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등으로의 수출이 당장 어려워도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남한이 흡수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 정경분리부문의 창출

핵보유로 전환된 북한의 핵정책, 핵비확산과 경제제재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對北 정책, 경제협력 확대지향적인 중국의 東進정책 등을 감안할 때 신북방정책의 추진은 정경분리부문의 창출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달리 말해 당근과 채찍이 병행된 개발협력정책의 추진이라는 구도하에 특정부문,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북핵문제와 분리되는 정경분리부문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쟁점은 ①북한 선박의 남측해상진출금지, ②남북교역중단, ③방북금지, ④對北신규투자금지, ⑤對北지원 보류 등을 골자로 하는 5·24조치의 처리방식이다. 현재 5·24조치는 유지에서 해제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³⁸⁾,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단계적 허용조치가 바람직하며, 5·24조치의 해제를 ‘반드시 선언적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5·24조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북방정책의 추진이라는 각도에서 중국 동북삼성, 러시아의 연해주 등 북방지역이나 북한경제의 글로벌화 유도라는 각도에서 제3국 지역부터 허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각도는 정경분리원칙의 적용방식이다. “정경분리원칙은 정경연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對北정책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경제협력은 정치(외교, 안보 등을 포함) 분야에서의 부정적 요인의 발생과 무관하게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원칙”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³⁹⁾.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그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 정부의 자금지원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선을 끊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특정부문이나 프로젝트의 성격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8) 임을출, “남북경협을 정치경제: 환경, 변수, 구조,”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정책·실천」, 북한연구학회 2012 동계학술회의, 2012. 12. 7, p. 63 및 양문수,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정책·실천」, 북한연구학회 2012 동계학술회의, 2012. 12. 7, pp. 116~117 참조.

39) 조동호, “남북경협 추진방식의 평가,” 「남북경협, 제대로 가고 있나?」, 한반도포럼/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 남남통합을 위한 2차 난상토론회, 2007. 11. 20, pp. 3~4(임을출, 위의 논문, p. 57에서 재인용).

라. 패키지형 진출전략의 구사

기존의 경제개발협력은 부문별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해 ①협력주체간의 연계, ②협력사업간의 연계, ③협력공간간의 연계 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 북한의 심각한 인프라부족과 경제난을 감안할 때 개발 없이는 효율적 경제협력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특정거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경제적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이 중요하고, 개발협력사업 진행시에도 ①배후도시와 배후산업시설, ②역사·문화·환경적 협력공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에너지협력, 농업지원과 협력, 자원개발, 공단건설 등 여러 프로젝트들의 시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패키지형 사업의 진행은 ①북한과의 기존합의를 선별적으로 존중하는 각도에서, ②중앙정부·민간기업·지자체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③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 재정부담의 적정화를 유도하며, ④개혁·개방 진전시에는 핵문제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⑤에너지·물류체계와 연계된 산업개발전략을 추진하고, ⑥기후변화예의 대응이라는 원칙하에 종합적인 개발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對北 농업협력은 단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공단건설이나 자원개발과 연계되는 방식이 향만, 도로, 전력 등 인프라투자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과거 일부 농업개혁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⁴⁰⁾ 북한은 당분간 집단농장체제, 주체농법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고질적인 식량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對北 농업개발협력은 ①농업특구 또는 경제특구 근접지역을 중심으로 ②기업농방식(단독투자, 합영, 합작 등)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수출지향적 도시국가형 농업을 건설하는 전략이 요망된다. 즉, 오늘의 북한농촌은 1960년대 남한의 산업혁명 시작직전의 농촌사정에 비해 여러 지표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 수출기업농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고 있다⁴¹⁾.

과거 한국은 산업혁명을 시작할 당시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로 보릿고개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격인 농민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40) 과거 박봉주내각은 “땀때기식으로 하지마라,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김정일지시에 따라 한때 ①가족단위 영농제(2~5가구)인 포전담당제 시범실시(2004. 3), ②기업소 부업농제 실시(2004. 1) 등과 함께 ③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정개혁전반에 대한 논의(2004. 6)도 진행 한 바 있었다.

41) 현재 북한은 ①농업인구가 약 850만명(전체인구의 35~40% 수준)정도로 추정되며, ②경지면적은 남북한이 비슷한 200만 정보(남한: 논 130만정보, 북한: 밭 136만 정보)이나 ③농사로 부양해야할 인구는 남한의 절반정도라 잠재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민 1인당 경지면적은 423평(1,396평방미터)으로 지극히 영세하여 중국, 대만,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없었으나 ①산업화를 통한 농촌인구의 흡수, ②농가당 경작 면적의 확대와 농민의 기업가화 추진, ③새마을운동의 실시, ④농어촌전화사업의 추진, ⑤영농방식의 과학화, ⑥그린벨트의 지정 등을 통해 도시국가형 농업체제의 구축에 성공한 있다⁴²⁾.

마. 북한경제의 글로벌화 유도

수출주도형의 경제구축 지원을 위해서는 ①북한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②개발 금융체제의 구축, ③국제금융기구의 가입⁴³⁾, ④시장친화적 법제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후속 韓美FTA협상에서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韓中FTA협상에서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북한 전체지역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북방시장, 북방경제시대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과거 박봉주내각이 추진했던 경제개혁구도(군수와 전략 물자를 제외한 특수부문의 축소와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체제하에서 동 개혁구도가 검토된다면 북한 민간의 산업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 남한의 개발금융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2004년 6월에 작성되었던 북한 박봉주내각의 금융구조개혁안은 ①은행 계좌 설정에 기업·개인·단체별 차등폐지와 거래비밀 철저보장, ②기업·단체 등에 계좌관리를 위한 법인제 도입과 대출약속이나 대출금 상환 미이행시 손해보상장치 마련, ③외화로 예금시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외화로 출금, ④은행결제방식 간소화와 무현금돈표제도 폐지, 그리고 거액 거래시 증표제 도입, ⑤예금자 사망시 상속인이 출금 가능하도록 제도화(재산상속법 제정), ⑥은행기구를 재정성에서 독립하여 내각 직속화하고 지점 설립권 부여, ⑦무리한 화폐교환 지양과 이러저러한 행정조치로 금융제도 불신조장 금지, ⑧독자기업 설립시 일정액의 설립금 은행예치를 의무화하고 예치금액 중 70%정도는 다시 은행대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⑨기업소가 보유한

42) 오원철, 「북한의 식량문제 고찰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아경제연구소, 1995. 8 참조.

4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서는 장형수,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 「수은북한경제」, 2008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pp. 1~18를 참조.

국가설비는 은행에 그 재산액을 등록하며 은행에 감가상각비를 납부하고 설비거래시 은행절차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⁴⁴⁾.

IV

맺음말

북한식 경제건설노선의 원천자원은 ①몇 백만 KW의 수력자원, ②석탄, ③철광석 및 약간의 광산자원, ④日政時의 구식 공장, ⑤북한의 인력 다섯 가지가 전부였다⁴⁵⁾. 이 다섯 가지 원천자원을 바탕으로 모든 기초원료를 만들고, 이 기초원료를 가지고 중간제품을 만들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최종제품까지 만들다보니 자연스럽게 전력·석탄·인력의 과소비형 구조가 정착될 수밖에 없었고, 이 국제경쟁력과 괴리된 과소비형 구조가 북한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기치로 개혁·개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1980년대부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강국의 건설은 요원했고, 이제는 그 과업이 김정일유훈이란 이름으로 어린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맡겨졌다.

2012년 4월 11일의 제4차 당대표자회와 4월 13일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계기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선포한 김정은체제는 일단 군부역할을 축소조정하고 당과 내각기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2012. 9. 25)에서 6·28방침의 후속 조치가 발표되지 못한 가운데⁴⁶⁾ 장거리 3단 로켓 은하 3호의 기습발사(2012. 12. 12)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체제에서 군부역할의 축소조정과 개혁·개방은 쉽지 않는 과제임을 알려주었다.

북한은 다시 ‘개혁·개방이 부족한 인민생활향상’이라는 기치로 돌아갈 것인가? ①대폭적 세대교체의 단행, ②과감한 스킨십을 활용하는 현지도와 육성연설, ③

44)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 67~68.

45) 오원철, 「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1995, p. 23.

46) 이례적으로 한해에 두 차례 열린 최고인민회의라 국내의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경제개혁과 관련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만 결정되고 경제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부인 리설주의 대동, ④부정적 사실의 공개, ⑤파격적 공연의 허용 등 김정은의 새로운 리더십은 인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데 도움이야 되겠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가 북한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가장 큰 딜렘마의 하나는 북한의 관료와 인민들의 준거기준이 될 수 있는 성공모델이 없다는 것이었다.¹⁶

〈참고문헌〉

- 김낙년,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제18권 제3호(2012. 9),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pp. 75~114.
- 김동열,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1990년 이후 소득 및 소비 구조의 변화,” 『경제주평』, 11-30(통권 457호), 현대경제연구원, 2011. 8, 26, pp. 1~15.
-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경제모델의 모색,” 『수은북한경제』, 2005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pp. 1~25.
- _____, “김정일시대 북한 개방법제의 특성에 관한 일 고찰,” 『통일과 법무』, 통권 8호(2011. 11. 겨울), 법무부, pp. 18~54.
- _____,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수요 급증과 나진항 진출,” 『수은북한경제』, 2011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pp. 39~68.
- _____, “최근 개정된 북방특구법제의 개혁·개방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2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pp. 49~77.
- 이수광, “황사의 근본적 원인, 사막화,” 『The Environment, Monthly』, 2009. 1, pp. 62~65.
- 이주철, 「2012년 국민통일의식조사 2부: 국민통일의식 변화추세 1999-2012」, KBS, 2012. 10. 25.
- 임민경, “중국의 노동력 부족현황과 전망: 라오닝성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2011. 5. 9(Vol. 2 No.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4.
- 임을출, “남북경협의 정치경제: 환경, 변수, 구조,”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정책·실천』, 북한연구학회 2012 동계학술회의, 2012. 12. 7, pp. 55~69.
- 양문수, “남북경협의 현황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북중경협의 확대심화와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경제협력포럼 주최 2011년 송년 남북경협정책토론회, 2011. 12. 22, pp. 41~67.
- _____,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정책·실천』, 북한연구학회 2012 동계학술회의, 2012. 12. 7, pp. 99~125.
- 오원철, 『북한의 경제정책』, 기아경제연구소, 1995.

- _____, 「북한의 식량문제 고찰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기아경제연구소, 1995. 8.
- 유경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2012. 4. 23(통권 제15호), 한국개발연구원.
- 윤재영, “단천 자원특구 개발을 위한 전력공급방안 검토,” 「북한 지하자원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자원연구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동주최 북한자원포럼 2012, 2012. 10. 5.
- 장형수,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 「수은북한경제」, 2008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pp. 1~18.
- 조성렬,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의 방향,” 「통일·외교·안보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대선후보의 정책방향을 점검한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8차 전문가포럼, 2012. 11. 16, pp. 23~49.
- 최경수, “바람직한 북한 지하자원협력사업 추진방안,” 「북한자원포럼 2012: 북한 지하자원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자원연구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2012. 10. 5.
-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홍익표,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및 활성화 방안,” 「KDI북한경제리뷰」, 2011년 5월호, pp. 23~44.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KEDO 경수로사업지원백서」, 2007.
-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남북관계」, 2010.
- 관세청, 「남북교역통계」, 각호.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 한국무역협회, KITA.NET(중국해관통계).
- 조선일보, “러시아 국책연구소의 특별보고서 북 붕괴 후.....,” 2012. 10. 29.
- 중앙일보, “중국 동해 출구전략 2탄 북한 나선향 이어 청진항 운영권도 확보,” 2012. 9. 11.
- 로동신문, 2012. 4. 12.
- 조선신보, 2012. 8. 29.
- 조선중앙통신, 2012. 10. 26.
- 길림신문, “장백산관리위원회 청첩급으로 진급,” 2006. 8. 3.
- 길림신문, “연변 <주>를 연변 <시>로 만들려고 한다.” 2010. 3. 9.
- 연변일보, “장백산관리위원회 청첩급으로 승격,” 2006. 8. 14.
- 연변일보, “중조 라선경제무역구 원정-라진도로 개통,” 2012. 10. 29.
- 연변TV방송국, “도문시 해화그룹 조선 청진항부두 공동경영권 취득,” 2012. 9. 12(<http://www.iybtv.com/html/xinwen/yanbianxw/zzjj/61505.html>).
- 흑룡강신문, “중조라선경제특구착공.” 2011. 6. 10.